



‘사람 중심’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얼마 전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장례식장을 들러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한구석에서 걸맞지 않은 글씨를 보게 되었다. 흐리게 지워진 글자는 ‘폐백실’, 이곳이 이전에 결혼식장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었다. 결혼할 젊은이가 줄어든 소도시의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인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0명에 턱걸이 중이고, 연간 출생아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30만 명대를 기록하였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내에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간 출생아 수도 20만 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1.0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은 소련 연방의 해체, 통일 후 동독 사회 등과 같은 체제 붕괴 시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저출산의 그들은 이미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 결혼과 출산이 급격히 줄어든 지방에서는 산부인과, 웨딩홀, 학원, 문구점 등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일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3월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의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의 주택 수요가 충분치 않아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행 비중이 가장 높

은 10~20대 인구가 크게 줄고 있지만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여 앞으로 수술을 하려면 학생층 현혈이 감소하는 방식 시즌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도 10년 넘게 여러 부처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영유아 돌봄을 무상보육으로 전환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금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 매년 새로운 대책과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결혼과 출산은 쉬이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결혼, 출산, 양육을 멀리하는 가치관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 43만 8000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8000명으로 8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출산율 하락 추세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2015년 30만 3000건이던 혼인 건수가 2017년 26만 5000건으로 약 4만 건 감소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년 새 20%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이렇듯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고 아이를 더 낳자고 열심히 광고를 하며 출산을 독려해도 국민들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의 방향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아이 낳고 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에게 맡겨졌던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무상보육

도입 등을 통해 사회화하긴 하였으나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욕구를 살피기보다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였다. 또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긴 하였으나,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엔 부족한 수준이었다. 또한 다자녀 가정만 제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떤 경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여 아이를 처음 갖고자 하는 계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의 저출산정책이 생산력과 경제성장, 국가의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인구 규모의 관점을 우선시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와 사회는 존속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대학 입학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졸업해서는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는 현재의 청년 세대에겐 경제 활력과 국가의 존속을 위해 아이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은 전혀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사회구조는 그대로 두고 아이를 낳으면 몇 가지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기 어려웠다. 출산 장려를 우선 말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겸하여 대통령과 함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천명하였다. 출산율과 출생

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 또한 '저출산'을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없애야 하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전략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거시적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사회시스템 혁신'으로 설정하자고 논의하였다. '미래 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인식과 가치관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정책,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 활성화로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여성에게 맡겨진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기 위한 지원 확대, 비혼 출산 등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정책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전략을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여성정

책적관점, 가족정책적 관점, 사회정책적 관점 등 접근론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이 일자리·주거·의료·돌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걱정 없이 누림으로써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접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하는 가부장적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는 접근, 비혼 가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정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출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접근, 가족과 아이가 주는 행복과 소중함을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인식의 재전환을 요구하는 접근 등 저출산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이들 모두는 의미가 있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맞다. 다만, 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무엇을 좀 더 우선하여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이 함께 논의하는 담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와 정밀한 현실 분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책 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몇 해 전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간 회의가 있었다. 지역사회 곳곳에 더 나은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어서인지 어느 분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젊은 직원들에게 결혼·출산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직접 결혼해라, 출산해라 하지 마시고 잦은 회식과 야근 시키지 마시고, 미혼 직원은 데이트할 수 있게, 자녀가 있는 직원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어디 가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